

프랑스 교육문제 '좌우갈등'



지구촌풍경

“권력은 내주어도 교육은 결코 우익에 뺏길 수 없다.”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보수당이 지난해말 상원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을 때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은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총력저지에 나섰다.

좌파들이 반발했던 것은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늘릴 경우 서민층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대한 교육투자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교육법 개정안의 상원 통과 직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교원노조를 비롯한 공립학교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대규모 파업과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교육법 개정안을 들

러싼 좌-우익 대립이 일촉즉발의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3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교육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좌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의 위헌판결로 교육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전은 일단락됐지만 지난 1백50년 동안 좌-우익세력간에 계속돼온 교육 주도권 쟁탈전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근대프랑스 체제가 공립학교 교육의 산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좌파는 역사의 진보를 거부했던 보수세력의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악화 기도를 묵과할 경우 계층적 불균형구조를 2세들에게까지 세습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전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구도가 희석돼가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프랑스의 교육법 파동은 교육제도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갈등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정수 기자